

실직한 직장인 2명 중 1명 “실업급여 못 받아”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여론조사 비자발적 실직자 55% 실업급여 못 받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못 받는 비율 ↑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91명 중 49명(54.9%)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실직 경험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1명(12.3%)이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123명 중 91명(74.1%)은 해고, 권고사직·희망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10명 중 6명(61.3%)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10명 중 6명(63.3%)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고 답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인사 담당자가 퇴사 일자 조율을 하자고 했다. 알겠다고 하자 사측에서 이직확인서 내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처리해 놓았다”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근무를 끝내는 일지만 제가 정한 건데, 이게 정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가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했다.

또 다른 제보자도 “회사에서 퇴직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적지 않고 개인 사유로 적으면 실업급여를 해주려고 했지만,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514명(51.4%)은 ‘실직 등의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67.5%), 5인 미만

(56.3%) 등 일터 약자들이 이 같은 응답을 많이 내놓았다고 직장갑질119는 말했다.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이 64%로 ‘동의한다’(36%) 응답보다 28%p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안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폐지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며 “수급액과 수급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만으로 재정 안정화를 꾀하다 보면, 실직 노동자의 생계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속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을 모든 일하는 이들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미수급을 둘러싼 갈등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사용자에게만 있는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김희면기자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 산업재해 예방 위한 채용 시 교육 실시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이하 근로자) 159명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채용 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슬비기자



곡성소방, 전남 21번째 소방서 개청식 개최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가 지난 19일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욱 도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청식을 진행하였다.

곡성=양혜영기자



담양소방, 캠핑장·낚시터 일산화탄소 감지기 대여 추진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겨울철 특수시책 일환으로 관내 캠핑장·야영장 및 주요 낚시터를 선정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여수경찰, ‘여수 여성일상지킴이’ 발대식 개최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주민주택·정성치안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여수 여성일상지킴이’ 20명을 위촉하고 치안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수=기동취재본부



해양경찰교육원, 모바일 전자도서관 서비스 개선 운영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성수)이 이달 말부터 해양경찰 직무 중심 전문도서관 추진 정책에 발맞춰 ‘모바일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해 운영을 시작한다.

서선욱기자



완도해경, 야간 도보 치안현장 점검에 나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18일 지휘관이 일몰 후 완도항 내 겨울철 화재 등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도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설 연휴 ‘아파트·전통시장’ 화재 없게...소방청, 안전점검 강화

비상구 폐쇄 여부·대피로 적치물 점검...위법 엄중 조치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대비해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피난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설 선물품 구매를 위해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대해 소방·전기·가스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소방대를 편성해 안전점검 및 심야 시간 예찰 활동에도 나선다.

연휴기간 여행을 계획하거나 문화생활 등 여가 활동을 즐기기를 위한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영화관, 공연장,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불시에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상구 폐쇄 여부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대피로 적치물 점검 등이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 등 이동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와 터미널, 공항 등 거점이동 시설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지적 사항을 설 연휴 전까지 시정하도록 한다.

피난 약자가 주로 거주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는 각본 없는 실시간 대피 훈련과 피난구조설비 사용법의 숙달 훈련을 통해 재난발생 상황에 대비한다.

오유나기자

소개팅앱서 만난 상대男에 2억 가로챈 30대女, 징역

사기 혐의, 징역 3년 6개월 선고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연인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반환금을 제외한 편취금 2억1464만원을 배상선정인 B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가집행 가능).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로부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총 2억2464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4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연인 관계가 됐고, 마치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그는 B씨에게 “아빠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쳐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거나 “다음주까지 아빠 오피스텔을 정리해 꼭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B씨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심지어 A씨는 여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연쇄적으로 연체가 발생하고 있었기에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실이나 재산 상태를 가장해 단기간에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로 공소 제기돼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20일 오후 서울 중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대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및 각계 시민단체 등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